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곳곳 결실

광주시 선언 1년만에 성과 가시화
민관 협업 시민햇빛발전소 가동
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 문 열어
광주-대구 RE100 시민클럽 출범

광주시의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목표 실현을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교육청, 5개 자치구와 시민사회는 지난해 8월 ‘광주공동체 기후 위기 비상사태 공동 선포문’을 발표했다. 이후 광주시의회는 그린뉴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 2월에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인 ‘탄소중립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지난 4월에는 서구 농성동 빗어울채아파트 옥상에 274kW 규모 햇빛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했다. 시

민과 공공기관이 협업해 만든 제1호 발전소다. 협동조합이 시민 펀딩을 통해 2억원,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 도시공사가 각각 출자해 4억원을 마련했으며 발전수익은 시민 햇빛발전소 건립에 재투자한다. 광주시는 공모를 통해 올해 총 1200kW 규모 시민 햇빛발전소 설치를 지원한다. 생활 속 에너지 전환 운동을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마을 거점센터’도 5개 자치구별로 1곳씩 문을 열었다. 지난달에는 광주-대구시장,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대구 RE100 시민클럽 공동 출범식’이 열려 에너지 부문 ‘달빛(달구벌과 빛고을) 동맹’도 강화했다. 광주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인공지능(AI)과 전력 거래를 연계한 에너지 융복합 산업도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첨단과학산업단지 2.5km에서 태양광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해 자동차나 건물에 직접 판매하는 전력거래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또 아파트 7개 단지 6240세대가 참여하는 ‘미래형 스마트 그리드 실증’ 사업을 통해 그린요금제, 가상발전소 등 새로운 전기 생산·판매 시스템을 실제 현장에서 테스트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내에서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옥상에서 생산한 전기를 대학건물 및 자동차 간에 거래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중이다. ‘2030 기업 RE100 추진협의체’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은 203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공동체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1년 여의 짧은 기간 동안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에너지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광주를 안전한 친환경 정경도시,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로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급여 끝전 모아 소외계층 지원

광주시·산하기관 1300여명 참여
3520만원 사회복지모금회 전달

광주시는 “자녀해 공직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이 십시일반 모은 급여의 일부인 3520만원을 소외계층 생계비로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모금액은 공공영역부터 나눔에 동참하길 희망하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이 참여한 ‘급여 끝전나눔’으로 마련했으며, 활용 방안도 참여자의 의견수렴을 반영해 선정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광주시민 352명으로 5개 자치구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했으며, 추석을 앞두고 1인당 10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급했다.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급여 끝전나눔’

은 매달 급여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으로, 급여 끝전의 일부(1만원 미만, 1000원 미만)를 기부하거나, 매달 급여에서 정률 혹은 정액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모금액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관리·집행하고 있다. ‘급여 끝전나눔’에는 광주시 공직자와 소방공무원, 광주관광재단, 광주그린카진흥원, 광주복지연구원,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교통문화연수원, 한국학호남진흥원 등 7개 공공기관 임직원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김지환 광주시 자치행정과장은 “매달 작지만 값진 나눔을 실천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힘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행복한 광주공동체, 따뜻한 광주공동체 실현을 위해 공직자부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생보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월부터 수급자 재산 기준 적용

광주시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26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선정기구의 소득·재산 외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해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월로 앞당겨 추진한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신청)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하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급여지급기준액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재산 외 부양의무자 기준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 및 신청 또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 및 신청 또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2022년

루미수 광주시 사회복지과장은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안타깝게 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취약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맞춰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상담 급증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과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 따르면 본부에서 운영하는 원스톱 노무 상담 건수는 2017년 200건, 2018년 289건, 2019년 276건, 2020년 234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398건이었다. 올해의 경우 육아 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등 모·부성 보호 관련 상담이 절반에 육박했으며 임금·퇴직금 문의, 근로관계 관련 상담 등이 뒤를 이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상담은 지난해 19건에서 올해는 8월까지 21건이었다.

고용보험 통계를 봐도 광주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건수는 2019년 106건, 2020년 385건이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375건이었다고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측은 전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따라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를 위해 1년 이내 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관계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 돌봄 시간을 확보하면서도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청렴세상 함께 만들어요...광주도시철도·녹동마을 상생발전협의회 캠페인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윤진보) 임직원과 푸른 녹동마을 상생발전협의회는 최근 광주시 동구 녹동역과 녹동마을 일대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렴 문화 확산 캠페인’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마을 안팎 생활도로와 천변 산책로 등을 청소하고, 시민들에게 손소독제 등을 배부하며 부패신고 활성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다양한 청렴 실천 방안을 홍보했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용산차량기지 인근 거주민 및 기업체들과 ‘푸른 녹동마을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주변 환경 정화, 마을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 참여, 주민 편의 향상 사업 개발 등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장애인정책 점검 모니터링단 추가 모집

광주시 27일~10월 8일 5명

광주시는 “2021년 장애인정책 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단을 추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019년 ‘장애인이 행복한 주체적이고 동등한 삶’을 비전으로 5대 전략, 15개 중점과제, 43개의 세부과제를 담은 ‘광주시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9-2022)’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올해 장애인정책 추진사항 점검을 위해 공모를 통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현장실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에 대한 연속성 및 전문성을 고려해 이미 구성된 15명의 모니터링단에 4개 분야(권익·안전, 교육·문화·체육, 사회참여, 복지건강), 5명을 추가 모집한다.

모니터링단 접수 기간은 27일부터 10월8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 및 장애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27일 올라올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모니터링단은 시 사업부서 및 관계기관 담당자 인터뷰, 장애당사자와 부모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시 자체평가에 대한 점검과 정책과제의 현장 실행 및 반영 정도를 평가하게 된다. 현장실사에 앞서 다음달 14일에는 분과별 위원과 모니터링단이 모여 사전워크숍을 진행하고, 분과별 모니터링 일정 및 진행방법, 과제별 특성에 따른 기술방법 등 평가세부기준 등을 논의한다. 12월에는 시 주관부서별 자체평가(정량평가)와 모니터링(정성평가)를 토대로 2021년 평가 및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향후 2022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가을철 도로 일제 정비

파손 부위 복원·시설물 보수

광주시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10월6일까지 가을철 도로 일제 정비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점 정비사항은 ▲하절기 도로포장 파손부위 및 노면 요철 ▲교량 및 터널 등 주요 시설물 기능 확보를 위한 유지보수와 배수시설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기준에 맞지 않는 도로표지 ▲도로시설물 청결상태 유지 및 동절기 도로 제설대책 수립 등이다. 광주시는 또 겨울철 설해대책 마련을 위해 사업비 4억원을 확보했으며 강설 및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5개 자치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주성 광주시 도로과장은 “효율적인 도로정비를 위해 도로포장의 파손 등 불합리한 도로시설물을 발견하면 해당 도로관리청에 즉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495,000,000원

상담 010-3733-3933